

부(富), 사회정의,
지속 가능한 경제를 위한 가이드라인



목 차

3 | 전언

3 | 가이드라인

1. 법치국가의 조건	3
2. 재산과 고용	3
3. 경쟁원칙	3
4. 책임원칙 적용	3
5. 경제조건의 안정	3
6. 국가의 공공재 제공	3
7. 연대와 사회안정망	4
8. 적합한 인센티브	4
9. 지속가능성	4
10. 자유시장정책	4

4 | 사회 및 시장경제적 경제질서확립을 위한 조건

세계 금융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세계적인 규정이 필요하다.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모델은 규정을 세우는데 있어서 하나의 좋은 예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독일 내에서 그 효과성이 증명되었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리스본 조약(Treaty of Lisbon)에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사회적 시장경제”를 확립하는 데에 의무를 다할 것을 합의하였다. 유럽의회를 포함한 EU-기관은 지난 몇 달 동안 다시 한번 바로 이런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 이제는 세계적으로도 이런 의무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틀이 정확히 무엇인지 EU 정치 및 경제 분야의 저명한 전문가들이 다음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전언

세계의 수 많은 국가들이 경제정치 협력을 점차 확대해 나아가면서 성장과 경쟁이 심화되었고, 교육여건은 개선되었으며, 사회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었고 빈곤층을 줄일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 자유, 정의가 위협을 받고 있다. 세계 부(富)의 불균형적인 분배는 경제와 정치적인 긴장관계가 점점 늘어나는 데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의 금융경제위기는 세계적으로 적용되는 규정만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경제에 대한 공동의 인식이 필요하다. 세계적인 합의가 있어야 하며 공동의 원칙과 가치를 바탕으로 부, 사회정의 그리고 지속가능한 경제를 확립해야 한다. 그러나 한 국가 또는 한 지역에서 보호주의를 도입하여 세계화의 이로운 점들을 위협해서는 안될 것이다. 공익, 민주주의의 합법성, 인간존엄을 기반으로 하고 각국의 문화와 사회를 고려하여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은 연대와 보충의 원칙에 기반하고 있다. 연대는 시장경제가 항상 공익을 목표로 두도록 하며 보충의 원칙은 자기책임과 자기주도를 위한 재량권을 보장해준다.

1. 법치국가의 조건

제 기능을 다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민주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는 법적 체제는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의 전제조건이다. 탄탄한 경제, 효율적이고 시민에 가까운 국가행정 및 좋은 정치에 필요한 원칙이다. 뿐만 아니라 관련 규정과 일관적인 감독은 모두가 그 규정을 따르도록 그리고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 따라서 규정이란 것은 경쟁경제체제에서 탈중앙적인 경쟁을 통해 사회적정책적으로 이익을 안겨줄 수 있는 적절하고 옳은 것이다.

2. 재산과 고용

효율적이고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경제시스템에서는 재화에 대한 소유권을 민간기업과 개인에게 주어야 한다. 사유재산은 노동을 통한 보수의 경쟁에 뛰어들 수 있도록 개개인에게 동기를 주고, 동시에 혁신적인 기업의 기반을 이루기도 한다. 사유재산이 보장되어야만 지속가능한 고용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시스템에서만 자기책임과 자기주도권이 탄생할 수 있다. 자기책임이나 자기주도권이 없

다면 잠재력, 교육, 혁신, 성장 그리고 부(富)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없다. 또한 많은 수의 중소기업은 그들의 개인재산으로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재산이란 사회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재산을 사용할 때는 공익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신중하며 지속가능한 기업활동을 펼칠 수 있으며 일방적이거나 단기적인 수익추구를 막을 수 있다.

3. 경쟁원칙

자유로운 가격형성을 기반으로 한 전 세계적인 경쟁질서는 부족한 자금을 배분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다. 잘 이뤄지고 있는 경쟁은 지속가능한 경제의 추진장치이기도 하다. 효율적인 경제발전을 촉진시키고 책임감 있는 행동을 강화시켜주며, 일방적인 시장권력이 형성되는 것을 막아준다. 경쟁 경제시스템에서는 국내외적으로 개방된 시장이 있어야 하고 국가와 세계공동체가 시장권력과 시장의 집중화를 관리해야 한다. 경쟁은 능력원칙과 기회균등의 원칙에 기반하고 있다.

4. 책임원칙 적용

자유로운 경쟁시스템에는 책임원칙이 적용되는데, 이는 경쟁을 할 때 참여자가 그의 각 행동에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수익성이 있을 때는 경쟁이 활발하게 이뤄진다. 그런데 손실이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해 개인이 책임지도록 한다면 무책임하고 과도한 위험한 행동을 제한할 수 있다.

5. 경제조건부의 안정

시장경제에서는 장기적으로 계획된 경제정책과 안정적인 거시경제정책이 필요하다. 이는 특히 국내의 금융시장에서 요구되는 것이다. 투자와 소비를 결정할 때는 경제가 안정적이라는 신뢰가 있어야만 투자나 소비를 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보호주의정책과 단기경제성장목표에만 초점을 둔 재정정책을 피해야 한다.

6. 국가의 공공재 제공

시장경제에서는 시장이 공공재를 제공하지 않거나 또는 부족하게 제공할 경우 국가가 이를 맡아야 한다. 잘 구축된 인프라, 기본적인 교육의 기회 그리고 광범위한 보건의료서비스제공은 국가가 참여해야 하는 분야들이다. 특히 사회적인 지원이 필요한 곳에서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의 개입은 일정 정도로 제한되어야 한다.

7. 연대와 사회 안전 망

경제성장은 빈곤층 퇴치를 도와준다. 시장경제에서는 수입의 불균형과 인구의 일부분이 소외되는데, 이런 현상을 완전히 막을 수 없다. 따라서 사회를 안정화하고 많은 사람들이 경제와 사회발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광범위하고 시장의 변화에도 안정적인 사회복지시스템, 지역 균형메커니즘 및 세제정책이 필요하다.

8. 적절한 인센티브

국가지출분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를 이용한 납세시스템이 필요하다. 납세시스템은 그러나 능력경쟁을 줄이거나 분배의 불균형을 발생시켜서는 안된다.

9. 지속가능성

모든 경제질서는 장기적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지속가능성은 생태적, 사회적 그리고 재정적인 성공을 달성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세대 간의 균형을 만들 수 있는 장치이다. 책임에 기반을 두고 있는 법질서는 지속가능성을 강화시켜준다. 특히 적극적인 기후보호정책은 미래 세대의 삶의 기반을 안전하게 보존해줄 수 있는 경제적 및 도덕적 의무과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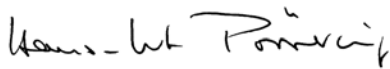
10. 자유시장정책

한 국가의 독자적인 행동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법이 될 수 없다. 오히려 그 반대다. 글로벌금융위기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들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조율된 정책과 공정한 규정이다. 보호주의와 경제적인 국가주의를 막기 위해 이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관련 국제기구를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사회 및 시장경제적 경제질서확립을 위한 조건

경계가 없는 글로벌 경제시스템에는 이를 관리하기 위한 국제적인 틀이 필요하다. 독일 내에서 그리고 유럽연합 내에서 이미 그 효과가 입증된 사회적 및 시장경제적 경제질서의 원칙과 규정을 세계적인 차원에 적용해야 한다. 이 원칙은 모든 사람들이 자유와 책임을 추구할 수 있도록 세워졌다. 금융시장 부문에 있어서는 개선되어야 하고 세계 무역질서 부문에서는 강화되어야 한다. 즉 합당성, 이행가능성 그리고 국제기구간의 보다 긴밀한 협력 및 협력포럼형성이 필요하다. 신뢰할 수 있는 법질서와 보충의 원칙에 초점을 두고 있는 민주주의 질서가 그 기반을 이루고 있다. 경쟁과 각 국가들의 정치참여는 경제발전과 국제 사회질서와 국제경제질서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와준다. 독립적인 미디어와 단체들을 통해 이에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두의 부(富)”를 위한 전제조건은 정치, 경제, 사회 관계자들이 국내외적인 틀 안에서 서로의 이해를 인식하고 의견을 일치하는 것이다.

2009년 7월8일 한국어 버전



한스-게르트 포테링 교수
유럽의회장



베른하르트 포겔 교수
장관
콘라드아데나워재단 총재



요제프 다울
유럽의회 EVP-교섭단체장



빌프리트 마르텐스 박사
유럽민족당(EVP) 대표



체스 P. 페르만 교수
베펜샤펠리크 연구소 소장